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박병광 책임연구위원
bkpark@inss.re.kr

- I. 문제의 제기
- II.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 양상
- III. 미중 군사충돌 가능성과 전개 양상
- IV. 대만문제의 한반도 파급영향과 대응 방향

국문 초록

이 보고서는 미중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긴장과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는 대만문제의 쟁점과 내용을 살펴보고, 군사충돌 가능성과 전개 양상을 간략히 고찰한 뒤,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침공 및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고조되는 추세이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목표는 △독립반대 △통일촉진 △통합촉진 △외부세력개입반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1996년 미사일시험발사는 독립반대, 시진핑 1기는 융합촉진, 시진핑 2기는 외부세력개입반대에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카드를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중 간 종합국력 격차가 갈수록 축소되고, 패권경쟁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될 경우 대만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 가능성은 증대될 전망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면 언젠은 의도하지 않은 무력충돌을 낳을 수 있으며, 동아시아 역내는 물론이고 한반도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먼저 외교적 측면에서 평화적 현상유지를 위한 기본원칙과 일관된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충돌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한 대화 중심의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을 시도함으로써 역내 안보문제에 대한 역할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이자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천하는 계기를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핵심어: 대만문제, 양안관계, 양안통일, 미중갈등, 군사충돌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 양상

1. 대만문제 관련 미중 갈등의 쟁점과 배경
2. 대만문제 관련 미중 양국의 인식과 의도

III. 미중 군사충돌 가능성과 전개 양상

1.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충돌 가능성
2.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충돌 전개 양상

IV. 대만문제의 한반도 파급영향과 대응 방향

I. 문제의 제기

-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침공 및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고조되는 추세
 - 미국외교협회(CFR)가 발표하는 <예방우선순위조사보고서(Preventive Priorities Survey)>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대만을 군사적 충돌 위험도가 가장 높은 등급의 지역으로 선정¹⁾
 - 필립 데이비슨(Philip Davidson) 前인도-태평양사령관은 美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을 주장했으며, 윌리엄 번스 CIA 국장도 2029년 전까지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언급하여 주목을 집중시켰음
 - ※ 대표적으로 올해 8월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대만섬 전체를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군용기와 군함이 ‘중간선’을 100회 이상 월선하면서 실질적인 침공연습을 감행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10.16) 연설에서 대만통일을 위해 무력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
 - 시진핑 연설과 관련해 대만 총통부는 “대만은 주권독립국가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는 대만인의 신념과 의지”라면서 “대만의 주류 사회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반대하는 민의를 분명히 밝혔고, 대만의 이런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²⁾
 -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시진핑의 발언 후,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대만에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면서 “중국은 이전보다 빠른 시간표를 가지고 대만을 점령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중국의 대만침공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³⁾

1) <예방우선순위조사보고서(Preventive Priorities Survey)>는 미국 외교협회 예방행동센터(Center for Preventive Action)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발생 가능성과 미국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갈등지역의 진행중이거나 잠재적인 위험도를 등급별로 평가 발표한다. CFR, *Preventive Priorities Survey*, (New York: CFR, 2022).

2) 『中央通信』, 2022년 10월 16일.

3) “Blinken Says China Wants to Seize Taiwan on ‘Much Faster Timelin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10-17/blinking-says-china-wants-taiwan-on-much-faster-timeline> (검색일: 2022.10.17.).

-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과 대립이 지속 되면 언제든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을 낳을 수 있으며, 동아시아 역내는 물론이고 한반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일례로 중국은 낸시 펠로시 방문 계기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실시 직후 서해상에서도 항행금지구역을 추가로 선포하고 군사훈련을 진행했으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군사적 감시태세를 유발시키는 것이었음
 - 중국의 대만침공이나 대만해협 충돌 시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을 동원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고,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기여도 요구가 고개를 들 수 있음⁴⁾
- 이 보고서는 미중 갈등과 대립이 심화 되는 속에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가장 위협적 요인으로 떠오르는 대만문제의 내용과 쟁점 및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전개 양상을 간략히 고찰한 뒤,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의도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게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연루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적 검토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
 - 대만문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주제에 관한 학술적 연구성과물이 증대되는 추세이나 미중 대립양상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연구는 여전히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⁵⁾

4) 박병광,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갈등의 동향과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제24권 8호(2022.8), p. 18.

5) 대만해협의 충돌 위기를 다룬 최근의 주요 연구성과는 상당히 희소하며 다음을 참조하라. 정재홍, “최근 대만해협 위기를 둘러싼 미·중 대만 대응 전략 고찰,” 『정세와 정책』 통권 355호(2022.10); 최우선, “대만 군사충돌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51(2022.5); 한용준, “트럼프 행정부시기 대만해협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위기관리 전략,” 『중소연구』 제44권 4호(2021).

II.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 양상

1. 대만문제 관련 미중 갈등의 쟁점과 배경

- 양안관계(兩岸關係)는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삼각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미국·중국·대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큰 삼각관계’와 중국공산당·민진당·국민당 사이에 형성되는 ‘작은 삼각관계’로 평가⁶⁾
 - 때로는 작은 삼각관계가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큰 삼각관계의 안정을 유도하고, 작은 삼각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큰 삼각관계가 안정을 견인하는 경우도 있음
 - 마잉주(馬英九) 총통 시기는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이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큰 삼각관계의 안정화를 이끈 경우라면, 천수이볜(陳水扁) 정부 시기는 작은 삼각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큰 삼각관계 속의 미중관계가 견고하게 대만해협의 불안정성을 제거한 경우
 - ※ 현재의 대만문제는 작은 삼각관계와 큰 삼각관계가 모두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동력과 신뢰가 약화된 경우로서 특히 큰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및 대립이 갈수록 고조되는 추세
-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미중 갈등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쟁점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것으로 그 동안 유지되어 오던 ‘현상유지정책’이 흔들리는 데 기인
 -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제정하여 대만을 위협하는 무력에 저항할 역량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대만의 독립과 유사시 개입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음
 - 그러나 최근 미중 경쟁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심화하고, 대만에 걸린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커짐에 따라 오랫동안 ‘현상유지’에 만족해온 미국과 중국의 호흡도 가빠지는 양상

6) 장영희, “양안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77호(2022.4.26.), p. 2.

※ 특히 대만을 ‘미수복 영토’로 규정하고 대만에 대한 주권은 중국이 갖고 있으며, 대만은 반드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중국의 신념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행동은 갈수록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미중 갈등의 주요 쟁점 중 두 번째는 미국과 대만 사이에 증대되는 고위급 교류 및 정부 간 협력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2018년 3월 미국 의회의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발효 이후 미국의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의회 의원 그리고 미군 장성 등이 수시로 대만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중국은 이에 강력 반발
 -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의회 최고지도자인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정치적 도발’로 간주되는 것이며, 대만의 집권 민진당과 독립지향 세력을 자극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 한편 대만이 2021년 1월부터 여권 표지를 ‘Republic of China’에서 ‘Taiwan’으로 개정한 데 발맞춰, 미국이 자국내 ‘주미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를 ‘주미타이완대표부’로 수정할 계획을 밝히자 중국은 이 역시 대만독립을 자극하는 행동으로 인식⁷⁾

- 대만문제에 관한 미중 갈등의 세 번째 주요 쟁점은 매년 대만에 미국정부가 대규모 무기 판매와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강력 반발
 - 미국은 거의 매년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근거로 내세우며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해 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만에 충분한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왔음
 -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중단하기도 했음
 -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임기를 시작한 뒤, 같은 해 8월 약 8,000억원에 가까운 무기의 대만판매를 승인했으며, 금년에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판매를 승인

7) 박병광,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갈등의 동향과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제24권 8호(2022.8), p. 19.

-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서 네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시진핑 지도부가 당면한 대내적 이슈가 더해지면서 양측의 타협과 양보를 더 어렵게 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선거에 불리할 것이기 때문에 대만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작용
 - 시진핑 주석 역시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집권 3연임을 위해 인민들의 지지를 결집하고 중국공산당 내의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만문제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음

2. 대만문제 관련 미중 양국의 인식과 의도

가. 중국의 인식과 의도

- 중국은 시진핑 집권 1기에 대만과의 정치적 대립 최소화 및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영향력 확대정책을 추구해 왔으나 집권 2기에는 대만에 대한 압박정책으로 전환되었음
 - 중국은 시진핑 집권 1기에 대만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물리적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만 주민의 마음을 얻고자 의도했으며,⁸⁾ 2015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시진핑(習近平)-마잉주(馬英九) 정상회담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시진핑 집권 2기에 중국의 대만정책은 압박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하되 그 표기는 각자 다르게 한다”는 ‘92共識(92consensus)’을 부인하는 민진당(民進黨)의 차이잉원(蔡英文)이 2016년 5월 대만 총통에 취임하였기 때문⁹⁾
 - ※ 민진당 정권이 등장한 이후 중국과 대만의 정부 간 교류는 단절되었으며, 관광객 방문도 중단되었고, 중국군은 수시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무단 진입하고,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음

8) 신상진, “중국의 대 대만정책과 대만 정권교체 이후 양안관계 전망,” 『중소연구』 제40권 1호(2016), p. 7.

9) ‘92共識(92consensus)’이란 ‘하나의 중국’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기본원칙으로 1992년 11월 홍콩에서 중국의 해협양안관계 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一中各表)하기로 합의했다.

- 중국은 대만문제가 양보·타협할 수 없는 핵심이익(核心利益)이고, ‘중국의 꿈(中國夢)’을 완성하는 핵심요소의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최고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강경 입장을 표명
 - 시진핑 주석은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연설에서 “어느 누구도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중국 인민의 강한 결심과 확고한 의지, 막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¹⁰⁾
 - 시진핑은 2021년 11월 미중 화상정상회담에서 “대만 분리주의 세력이 난동을 부리고 레드라인(底線)을 돌파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며, 금년 7월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
- 중국이 최고지도부를 포함하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며 대만을 압박하는 주요 의도와 목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독립지향의 민진당 정권을 방치할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독립세력을 고립화시키고, 민진당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음
 - 둘째,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데에는 시진핑의 3연임과 관련하여 중국내 인민의 지지와 정치적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 역시 작용했으며,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후에도 대만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은 불변할 전망이다¹¹⁾
 - 셋째,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 배경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대응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바, 대만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지정학적 측면은 물론이고, 공급망 재편을 포함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¹²⁾
 - 넷째, 중국은 대만을 압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는바, 대만의 독립지향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압박을 늦추면 국제사회가 미국의 의도에 편승하여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해 줄 것으로 우려

10) 『人民日報』 2021年 7月 2日.

11) 시진핑 주석은 10월 16일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대만문제의 해결은 중국인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무력 사용을 포기할 것을 약속하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옵션을 보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2) 박병광,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갈등의 동향과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제24권 8호(2022.8), p. 22.

※ 중국의 대만에 대한 목표는 △독립반대 △통일촉진 △통합촉진 △외부세력개입반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1996년 미사일 시험발사는 독립반대, 시진핑 1기는 융합촉진, 시진핑 2기는 외부세력 개입반대에 주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평가¹³⁾

나. 미국의 인식과 의도

- 미국의 전통적인 대만정책의 핵심 기조는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음
 -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하여 대만에 자기방어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미중 관계를 유지해 왔음
 - 그러나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기존의 대만정책 변화를 시사하고 있으며, 일례로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대만여행법(2018.3)’, ‘타이베이법(2018.12)’, ‘전략적 경쟁법(2021.4)’, ‘대만정책법안(2022.9)’ 등은 모두 대만에 대한 경제·외교·군사적 지원을 담고 있음
 - ※ 특히 지난 9월 美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2022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이 최종 발효될 경우 대만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 수준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위배된다는 중국정부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¹⁴⁾
- 최근 들어 미국의 대만정책이 변화의 조짐을 보인 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포함하여 미중 패권경쟁 심화가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
 - 첫째, 미국 내에서 중국주도의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 우려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례로 前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제독은 2021년 3월 의회청문회에서 향후 6년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

13) 중국 정부는 1993년과 2000년에 이어 2022년 8월 10일, 22년 만에 <대만백서>를 발표하여 통일을 실현하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선포하였다.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臺灣問題與新時代中國統一事業』(北京: 中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22年 8月).

14) ‘2022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은 향후 4년간 대만에 35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대만을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major non-NATO ally)’ 지위로 격상하며, 현 ‘타이베이 경제 및 문화대표부’의 명칭을 ‘주대만 대사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둘째,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으로서 대만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에게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과 같으며,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핵심인 이른바 ‘칩4(Chip 4)’ 동맹체제에서 핵심국가라 할 수 있음
- 셋째,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민주국가 연대를 통한 반중전선 강화 의도 등이 작용하는바, 가치와 규범의 차원에서 미국은 대만 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식 권위주의 체제와의 대결에서 우위에 서고자 의도
 - ※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은 미국이 대만을 미중 대결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증대되는 중국의 위협과 압박 속에서 안보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

III. 미중 군사충돌 가능성과 전개 양상

1.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충돌 가능성

- 최근 대만문제 관련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는 추세이지만 단기적 측면에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충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
 - 첫째, 대만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대립이 미중 양국 최고지도자에게 단기적으로 지지층 결집과 충성심 견인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무력 충돌로 갈 경우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둘째, 중국으로서는 아직 미국과 직접 충돌을 하기에는 군사·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며,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지 않는 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강(自強) 능력을 키우고자 의도
 - 셋째, 미국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두 개의 전선을 형성하고 싶지 않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정치경제 회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가능한 무력 충돌과 전쟁개입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의도

- 그러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중 종합국력 격차가 갈수록 축소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전반위적으로 격화될 경우 대만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 가능성은 증대될 전망
 - 2021년 10월 대만 국방부장관은 입법원 보고에서 2025년까지 중국이 전면적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20차 중국공산당대회 개막연설(22.10.16)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 성과를 주장하며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제기
 -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확정에 따라 중국은 단일지도체제 강화를 계기로 더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해문제(四海問題)를 둘러싼 미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며 특히 대만문제의 위기 부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¹⁵⁾
 - ※ 대만해협의 무력 충돌 가능성 관련 2027년이 주목되는바, 2027년은 △시진핑 4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해가 될 것이고 △중국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대만 17대 총통선거를 앞둔 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세 가지가 비타협적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어느 때보다 무력 충돌의 유혹과 가능성이 증대될 전망

2.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충돌 전개 양상

-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충돌의 경우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과 목표에 따른 상이한 군사충돌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음
 - 우선 △대만 정부가 독립선언을 하거나 △대만 내에서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독립 국가로 외교적 승인을 시도할 경우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과 군사적 충돌을 불사할 것으로 예상
 - 만일 △대만이 핵무장을 시도하거나 미국 핵무기가 대만에 배치될 경우 △대만이 대륙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군 또는 미사일방어체계(MD)가 대만에 재배치되는 경우에도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행동을 실시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 중국이 2005년에 제정한 <반국가분열법>은 “대만 독립세력이 어떠한 방식이나 명목으로
 - 1)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 하거나
 - 2)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 3)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 정부는 “비평화적인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여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한다”라고 규정

15) 중국이 직면한 ‘사해문제’란 중국을 둘러싼 南中國海(남사군도/서사군도 영토분쟁), 東中國海(조어도 분쟁), 臺灣海峽(양안갈등), 黃海(북핵문제) 등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지속됨으로써 국가안보의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가리킨다. 박병광, “중국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와 함의,” 『INSS 전략보고』 No.66(February, 2020), p. 8.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충돌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매우 복잡한 양상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음¹⁶⁾
 - 첫째, 대만독립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독립 움직임과 의지를 방해하고 내분을 유도하기 위해 무력시위 및 사이버전, 전자전, 여론전, 심리전을 중심으로 대만에 대한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을 실시할 수 있음
 - 둘째, 대만독립 움직임이 한계치(red-line)를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 독립 의지를 강압적으로 꺾기 위하여 중국군은 과거 진먼다오(金門島)에 대한 포격의 경우처럼 특정 목표지점을 대상으로 제한적 미사일 공격 및 포격을 실시할 수 있음
 - 셋째, 대만독립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중국 푸젠성(福建省)에 인접한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와 마주다오(馬祖列島)에 대한 기습적 점령 작전을 시도할 수 있음
 - 넷째, 대만독립 움직임이 구체화할 경우, 대규모 군사력과 함대를 동원해 대만의 주요 항구들을 봉쇄하고 에너지 수송로를 봉쇄하며 외국과의 물류교류 및 수출입에 대한 전면적 차단을 시도할 수 있음
 - 다섯째,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대만섬의 주요 군사기지와 기간 시설에 대한 전면적 미사일 및 공중폭격을 시작으로 주요 항구와 공항에 대한 봉쇄 및 전면적 상륙작전을 시도할 수 있음
 - ※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과 전개 양상은 △중국의 대만독립 저지 의지와 군사력 △미국의 대만방어 의지와 군사력 △대만의 독립추구 의지와 단결력에 따라 상이할 것이며, 성패의 관건은 군사력보다 정치적 의지에 달린 것으로 판단
-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충돌 시 구체적 전개 양상은 중국의 무력행사 의도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음
 - 첫째, 저장도 무력행사의 경우, 중국은 관리 가능한 위험 수준의 방책으로 미국 및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 방지 하에 정치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겠지만 대만 주민의 반중 정서와 국제사회의 비판 등을 고려할 때, 대만 내 분란 상황 조성과 대만 집권세력 퇴진 목표달성 불투명
 - 둘째, 중강도 무력행사의 경우, 외도(外島) 점령은 현재의 군사력으로도 가능하며, 서태평양 진출에 유리한 교두보 확보 의미가 있겠지만 대만통일이라는 핵심 사안의 해결 없이 역내 불안정 장기화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음

16) 최우선, “대만 군사충돌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51(2022.5) 참조.

- 셋째, 고강도 무력행사의 경우, 중국군의 현재 군사력과 작전능력을 고려할 때, 상륙작전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며 특히 중국군의 전력투사 및 수송 능력, 합동 후근보장 및 동원 능력 부족과 미국 및 일본 등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¹⁷⁾
- ※ 그러나 대만해협 위기는 일종의 재발성 위기로 언제든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대만침공을 위한 중국군의 전략과 전력은 발전하고 증대될 것으로 판단

IV. 대만문제의 한반도 파급영향과 대응 방향

◎ 대만위기 발생시 한반도 파급영향 다각도 분석 필요

- 대만문제는 지속적으로 미중 대립과 역내 안보 불안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며, 대만유사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개입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측면에서 한반도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 폴 라캐머러(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이외 지역의 비상사태와 지역 안보위협 상황에 따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¹⁸⁾
 - 대만해협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동원되거나 한국의 직·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이 증대되며, 에너지 수입 등 경제안보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파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임
 - 북한 역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시도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조 및 자신의 전략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심리전과 하이브리드전 및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음

17) 대만해협 군사충돌을 가정한 미중 양국의 군사력 비교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성훈, “아태지역에서 미중의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대만해협 위기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 No.171(July 2022).

18)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주한미군, 한반도 밖으로 투입 가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0992#home> (검색일: 2021.5.18.).

◎대만문제 관련 외교적 기본원칙과 일관성 유지

-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먼저 외교적 측면에서 평화적 현상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원칙과 일관된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
 - 한국은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양안관계의 특수성과 대만문제는 중국이 내정으로 여기는 민감한 주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다자무대 및 한중, 한미 양자대화에서 대만문제에 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
 - 한국은 다수국가가 양자적으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지할 필요
 -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지속할 필요
 - ※ 상기 표현은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는 객관적 표현이며, 역내 안정과 평화를 희망하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입장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 대만문제 관련 군사 충돌 등 최악 상황 대비 필요

-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안보적 측면에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충돌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양안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대만에서는 수년 내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충돌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¹⁹⁾
 - 우리 정부는 △중국의 대만침공에 대한 의지 여부 △대만침공 조건과 상황 및 시나리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 △미국이 대만의 구원자로 나설 것인지 정확히 예측·판단할 필요

19) 미국내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다룬 저서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Ian Easton, *The Chinese Invasion Threat: Taiwan's Defense and American Strategy in Asia*, (Manchester: Eastbridge Books, 2019); David Sacks, “How to Survive the Next Taiwan Strait Crisis,” *Foreign Affairs*, (July 29, 2022). <https://www.foreignaffairs.com/usa/how-to-survive-next-taiwan-strait-crisis> (검색일: 2022.9.10.).

- 만일 대만해협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원칙적 불개입 기조하에 관여 불가피 경우에는 사안별 대응”이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미국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수행 분야를 사전에 식별하여 대비할 필요

◎ 대만문제 관련 우리의 외교역량 증대 기회로 활용

- 한국은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을 시도함으로써 역내 안보문제에 대한 역할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이자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천하는 계기 모색²⁰⁾
 - 대만해협 위기의 본질은 ‘하나의 중국정책’이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증대되고 관련 국가들 사이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점에서 한국 주도하에 대만해협 위기관리와 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만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
 - 또한 대만해협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양안간 또는 제3국과 양안을 포함하는 다자대화가 회복되어야 하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양안의 대화·교류의 장소(場)와 동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
 - ※ 가령 제주평화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평화의 섬’ 이미지를 강조하는 제주에서 한·미·중, 한·미·대만, 한·미·중·대만의 형식으로 우선 가능한 수준의 다자대화를 추진하고, 상호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기본 목표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 고려

20) 한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 설립을 통해서 대만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중국은 대만문제를 내정(內政)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자안보협력기구에서 양안문제 논의에 절대 반대할 것이란 점에서 먼저 대화의 장과 이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박병광, “중국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와 함의,” 『INSS 전략보고』 No.66(February, 2020).
- 박병광,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갈등의 동향과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제24권 8호 (2022.8).
- 신상진, “중국의 대 대만정책과 대만 정권교체 이후 양안관계 전망,” 『중소연구』 제40권 1호(2016).
- 이성훈, “아태지역에서 미중의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대만해협 위기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 No.171(July 2022).
- 장영희, “양안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77호(2022.4.26.).
- 정재홍, “최근 대만해협 위기를 둘러싼 미·중 대만 대응 전략 고찰,” 『정세와 정책』 통권 355호 (2022.10).
- 최우선, “대만 군사충돌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51(2022.5).
- 한용준, “트럼프 행정부시기 대만해협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위기관리 전략,” 『중소연구』 제44권 4호(2021).
- CFR, Preventive Priorities Survey, (New York: CFR, 2022).
- Ian Easton. *The Chinese Invasion Threat: Taiwan's Defense and American Strategy in Asia*, Manchester: Eastbridge Books, 2019.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臺灣問題與新時代中國統一業』北京: 中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22年 8月.
-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주한미군, 한반도 밖으로 투입 가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0992#home> (검색일: 2021.5.18.).
- David Sacks, “How to Survive the Next Taiwan Strait Crisis,” Foreign Affairs, (July 29, 2022).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how-survive-next-taiwan-strait-crisis> (검색일: 2022.9.10.).
- 『人民日報』 2021年 7月 2日.

Abstract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Taiwan Strait and South Korea's Policy Direction

PARK, Byung Kwa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ensions over the Taiwan Strait are increasing, and the possibility of China's invasion of Taiwan and a US-China military conflict is also on the rise. If military tensions and confrontations over the Taiwan Strait continue, unintentional armed clashes can occur at any time, and it is expected to have a serious impact not only on the East Asian region but also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xamine the issues and contents of the Taiwan issue in a situation where the US-China confrontation is escalating, to draw implications, and to suggest a policy direction for Korea. The most important background to the recent US-China conflict over the Taiwan issue is the faltering of the 'One-China Policy'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China, the Taiwan issue is a core interest that cannot be conceded and compromised, and is one of the key factors in completing the "Chinese Dream". Although tensions and confrontations over the Taiwan issue are on the rise, in the short term, the possibility of a US-China clash over the Taiwan Strait is considered slim. However, in the mid-to-long term, if the gap between the US and China's comprehensive

Abstract

national powers gradually narrows and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ntensifies in all dimensions, the possibility of armed conflict over the Taiwan Stra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Taiwan issue will continue to be a major issue in the US-China conflict and regional security instability, and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FK an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provocation. In the event of a military clash in the Taiwan Strait, it is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in principle, seek non-intervention. However, when intervention and support are unavoidabl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minimal interven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prepare in advance the role of South Korea that the US can demand from the level of the ROK-US alliance.

Keywords: Taiwan Strait, China's Invasion, US-China Relationship, Strategic Flexibility

INSS

전략보고

November 2022. No.18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 02-6191-1000 📠 02-6191-1111 🌐 www.inss.re.kr